

신문모니터

- 문서번호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_부산_010
-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복성경)
- 제 목 [부산 선거보도모니터 보고서] 부산언론 거대양당 올인, 제3당 후보 토론회 초청도 배제
- 날 짜 2022년 5월 25일(수)

[부산] 부산언론 거대양당 올인, 제3당 후보 토론회 초청도 배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부산 신문 5차 모니터보고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부산민언련이 작성해 5월 25일(수요일) 발표했습니다.

5월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지역신문의 선거보도도 대폭 늘었다. 유튜브 토론 중계,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와 같이 후보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 차이와 후보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 기사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부산시장 양강 후보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기획을 진행한 데다, 선거 이슈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2030 등록엑스포’를 또다시 부각하면서 형식과 내용 모두 진보정당 후보는 배제해 공정하지 않았다. 또 정치권, 각 정당에서 승패를 전망하는 판세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등 정치권 중심 선거보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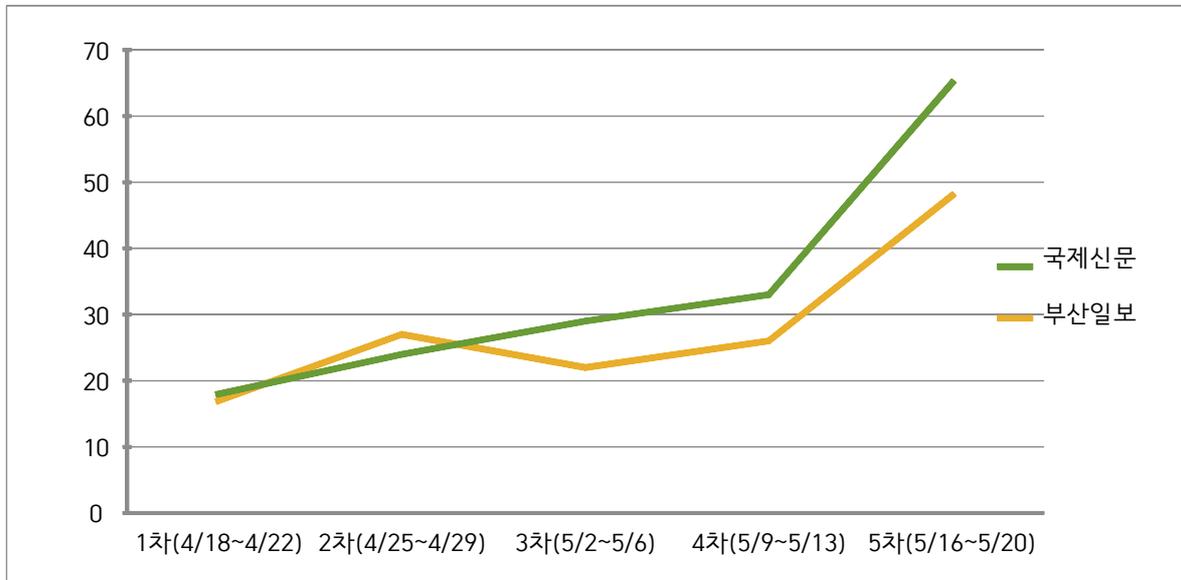
선거보도량 증가했지만..

후보 토론, 인터뷰 등 후보자중심 기획 구성

지방선거 보도량은 총 113건으로 지난주 59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부산일보),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부산일보), ‘부산시장 심층 인터뷰’(국제신문) ‘유튜브 맞짱 토론’ (국제신문) 등 부산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 기획기사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후보 중심의 기획기사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제신문은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 시민선거 캠프 ‘동백’>을 보도했다. 시민 1,072명에게 공약 제안을 받아 100개 공약으로 나눠 소개했고, 부산시장 후보에게 전달해 결과도 보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기사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스트레이트*	45	34	79
기획기사	2	9	11
인터뷰기사	13	0	13
의견기사	5	4	9
사진기사	0	1	1
기타	0	0	0
합계	65	48	113

△ <표1> 선거보도 건수 및 기사유형별 건수(*스트레이트+해설 유형도 포함)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 <그림1> 지역신문 선거보도 건수 추이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망을 판세로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양자대결, 양강 구도를 부각했다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해설·검증)	23(19/4)	22(17/5)	45
공천/경선	1	1	2
선거판세·여론조사	12	6	18
행보/동정	15	16	31
선거전략	8	1	9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6	6	12
선거사무	1	1	2
후보(정보/검증)	19	9(5/4)	28
토론회 중계	3	1	4
기타	6	6	12

△ <표2>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 등의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인 이미 확정된 후보자가 33명이나 돼,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 부산일보는 <'무투표 당선자' 501명...경쟁률도 역대 최저>(5/19)에서 거대 양당 대결구도를 원인으로 짚으며 유권자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 지적했다. 반면, 국제신문은 <'북구다' 25세 후보 최연소...'해운대1' 44살 차이 맞대결 눈길>(5/16) 후보 등록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 무투표당선자 수만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비례대표 선택을 위한 정보나 정당정책을 알리는 보도는 여전히 부족했다.

선거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광역단체장	26	23	49
교육감	12	8	20
기초단체장	21	9	30
광역의원	4	2	6
기초의원	4	2	6

△ <표3> 선거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산시장, 교육감 선거 보도량이 늘었다. 반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급 기사는 합쳐도 12건에 불과했다. 집행하는 예산과 권한이 막강한 부산시장과 교육감에 대한 보도

는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시장과 교육감의 시정,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구체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역시 적합한 후보인지 알고 뽑아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물 외에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에도 지역신문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어 아쉽다.

정당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더불어민주당	7	3	10
국민의힘	7	4	11
정의당	4	4	8
민주당+국힘	22	19	41
민주당+국힘+정의당	8	4	12
군소정당	3	6	9
무소속	5	1	6

△ <표4> 정당별 언급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거대 양당 중심 보도는 여전했다. 정당별 언급 건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언급된 것이 41건으로 42% 비중이었고, 양당의 언급 수를 모두 합산하면 전체 76.2%나 차지했다.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가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에 대부분 출마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편중이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특이한 선거운동 방식을 소개한 <꼬마 트럭 골목 유세 신트렌드...슈퍼히어로 변신한 후보도>(국제신문, 5/20)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만 소개했다.

한편, 모니터기간 부산일보에서 진보정당을 언급한 기사는 단 한 건으로, <이 와중에 중앙당 성추문까지...부산 정의당, 제3당 지위 지킬까>(5/18, 5면)였다. 해당 기사는 정의당이 부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한데다 중앙당 성추문 사건으로 부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부산 제3정당 지위를 유지할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의 어려운 상황을 소개한 기사인데, 마지막 단락에서 부산지역 4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부산녹색당)의 출정식 개최 소식을 언급했다. 부정적 전망 기사와 선거 출정식을 함께 보도한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는 것 외에 내용상 공통점이 없음에도 한 기사에 여러 내용을 우겨넣은 모양새였다.

군소정당 후보 원천 배제하는 토론, 정책 이슈 설정 후보에게도, 유권자에게도 공정하지 않다

양자대결 강조, 군소정당 배제 경향은 부산시장 선거보도에서 두드러졌다. 제목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양자 구도를 부각했고, 기사에서조차 정의당 김영진 후보 행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5/16 <변성완 '원톱'과 박형준 '원톱' 대결> 5/18 <변성완-박형준 '가덕 조기개항 방안' 대결> 5/17 <윤 친원전 정책 때린 변성완, 수출입은 이전 띄운 박형준> 5/19 <수협 이전 카드까지 꺼낸 변, 영어사용도시 부산 외친 박>	5/18 <박-조기 개항 방안 “총괄 사업, 부유식으로 가능”, 변-공은 못 넘겨 “개항 늦춰진 책임은 박 후보”> 5/19 <변성완, 박형준 '품격 있는 선거' 손잡았다> 5/19 <변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박 “부산을 영어상용도시로”> 5/20 <박후보, 플로팅 공항 혼선 야기, 변 후보, 행복주택 오락가락 왜?>

△ <표4> 거대양당 부산시장 후보 중심 기사 목록

특히 이번 모니터 기간 주목한 점은 그동안의 구색맞추기식 보도마저 포기하고,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정의당 후보를 원천 배제하는 ‘형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국제신문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001면 종합

알림 국제신문 유튜브 생중계

부산시장 후보 맞짱 토론

국제신문이 6·1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 두 유력 후보를 초청해 ‘맞짱 토론’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후보는 맞짱 토론을 통해 부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동시에 서로 상대 정책을 두고 ‘송곳 검증’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두 후보의 양보 없는 토론은 누가 더 글로벌 도시 부산을 이끌 적임자인지, 누가 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제신문 지면은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됩니다.




변성완 후보
박형준 후보

-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월) 오전 10시30분 국제신문사
- ▶ 출연자 : 변성완, 박형준 후보(기호 순)
- ▶ 채널 : 국제신문 유튜브 생중계(유튜브 접속 후 국제신문 검색)
- ▶ 참여방법 :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 가능 ▶ 문의 : (051) 500-5095

△ 5월 20일 변성완, 박형준 후보 초청 유튜브 토론 진행한 국제신문

5월 20일 국제신문은 1면 <[알림] 국제신문 유튜브 생중계>에서 부산시장 후보 맞짱 토론을 생방송 하겠다고 알렸다. ‘맞짱 토론’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토론 방송은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초청하지 않았다. 알림에서는 ‘두 유력 후보를 초청했다’며 두 후보는 부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동시에 상대 정책을 두고 ‘송곳 검증’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김영진 후보에게는 공약을 설명하고, 송곳 검증할 기회에서 배제한 것이다.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기회도 뺏은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기획이다.

다음으로 부산일보의 <변성완, 박형준 '품격 있는 선거' 손잡았다>(부산일보, 5/19)를 보자. 이

기사는 부산일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를 앞두고 변성완, 박형준 두 부산시장 후보를 초청하여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초청하지 않았다. 후보 간 정책대결을 다짐하는 기획에 특정 후보는 배제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라는 기획 기사 형식 또한 마찬가지다. 후속 기사로 김영진 후보를 포함할지 모르나, <박후보, 플로팅 공항 혼선 야기, 변 후보, 행복주택 오락가락 왜?>(부산일보, 5/20)는 변성완, 박형준 후보의



△ 5월 20일 변성완, 박형준 후보 지면토론 기획한 부산일보 질문과 응답으로만 구성했다.

지역신문은 지역 의제를 기사화할 때도 정의당 후보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산일보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 부산선거 '핫이슈' 부상>(5/18)에서 “6.1 지방선거를 2 주가량 앞둔 가운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이 지역 최대 선거 이슈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라고 하며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 해법’을 지방 선거의 주요 이슈로 의제 설정했다. 여기서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 해법’이 부산일보가 주장하듯 정말 ‘핫 이슈’인지, 특정 후보가 띄우는 이슈인지는 논외에 두더라도 이 과정에서 가덕 신공항의 안전한 개장을 주장하는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가령 <박-조기 개항 방안 “총괄 사업, 부유식으로 가능”, 변-공은 못 넘겨 “개항 늦춰진 책임은 박 후보”>(부산일보, 5/18)에서는 김영진 후보를 제외하고 변성완, 박형준 후보 입장만을 3면 전체를 할애해 기사화했다.

국제신문의 경우에는 부산일보만큼 지나치진 않지만, 여전히 양당 중심의 보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변성완-박형준 '가덕 조기 개항 방안' 대결>(국제신문, 5/18), <플로팅 공항 놓고 여 “해상 도시 모델” 야 “희망고문 말라”>(국제신문, 5/18)의 사례처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변성완-박형준 '가덕 조기 개항 방안' 대결>(국제신문, 5/18)에서는 기사의 말미에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짧은 논평을 보도했다. 여기서 김영진 후보는 “보수 양당이 한목소리로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라고 하는데,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며 기후위기 걱정을 하면서 산을 깎고 섬을 뜯어 바다를 메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이 6.1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 언론사들은 의제 설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방 선거 의제에서 가덕신공항과 같은 개발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개발 담론의 대안을 제시하는 군소정당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토론 정보 전달 효과는 있으나, 검증 역할은 미흡

선거 기간 후보 토론은 후보자를 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정 TV토론회를 주관한다. 지역언론은 이와 별도로 토론 형식을 차용해 선거보도를 한다.

그렇다면 실시간 후보 토론을 보여주지 못하는 신문사는 이 같은 토론을 어떻게 기사화했을까. 부산일보는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는 상호토론을 기획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하고 상대 후보가 답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국제신문은 유튜브 토론을 생중계하고 결과를 기사화하고 있다. 모두 부산시장,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한 기획이다.

△ 국제신문 5월 17일 교육감 유튜브 중계 기사, 부산일보 5월 20일 교육감 '후보가후보에게 묻다' 기사

우선 두 신문사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 후보, “불리한 정시 왜 확대?” “김 후보, 학력 저하 대책 있나?”>(부산일보, 5/20)는 진단 평가, 학교 통폐합, 대입 정시·수시 등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또한 국제신문 <김석준 “부산은 수능 상위권” 하윤수 “S대 진학자 수 급감”>(국제신문, 5/17)에서는 김석준, 하윤수 후보의 정책(정당공천제 도입, 자사고 및 외고 유지, 전수학력평가 도입,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픽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존 논쟁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지난 8년 부산 교육의 성과와 평가’는 김석준, 하윤수 후보가 팽팽히 대립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으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산 교육 평가를 유보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실은 기초 통계자료로 검증 가능하다. 더욱이 학력 문제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된 양극화 문제이기도 한데 각 언론사는 후자의 영역에 사실 확인도, 후속적인 질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산일보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는 후보가 던진 질문에 상대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검증 책임을 후보에게 맡기는 형식이었다. 깊이 있는 정책대결을 추구한다고 했으나 질문에 대한 재질문은 없어 결과적으로 후보 입장과 해명을 나열하는 데 그친 측면이 있다. 국제신문 유튜브 토론 중계는 다양한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듣고도 제목에서는 ‘부산 수능 상위권’ ‘5대 진학자 급감’과 같이 학벌을 강조하고, 의혹 제기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정작 기사는 의혹 제기 대해 후보 간 공방과 해명만을 소개할 뿐 추가로 사실 확인하지는 않았다.

신문 토론 기사는 실시간 토론은 아니다. 이는 단점이면서 한편으로 장점이 될 수 있다. 신문 매체의 특성을 살려 토론 의제를 신중하게 설정하거나 또는 후속 기사로 후보의 주장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이번 기획은 후보 정책을 알리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후보에 치우친 점, 심층적인 질문과 후보 검증보도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모니터 대상: 2022년 5월 16일(월)~5월 20일(금) 국제신문, 부산일보 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 중 부산지역 보도

2022년 5월 25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